

#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차로 대신 인도 겸용 고질체납자 은닉 가상자산 압류 추진

### 전주시, 시민 의견 수렴 결과 토대로 기존 차로→겸용도로 변경 설치키로

안전과 교통혼잡 우려로 논란이 불거진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 기존 차로에 설치하는 방안이 아닌 인도에 자전거 겸용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전주지역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절된 자전거도로의 연결, 공영자전거 대여소 확대, 하천 자전거·보행자 도로 분리 등 다양한 자전거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전주시는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중교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제대로 자전거도로를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기존 차로에서 겸용도로로 변경해 설치키로 하는 내용을 끝자로 전주시 자전거 정책 및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편도 5차선인 백제대로를 4차선으로 좁히고 자전거 전용차로를 개설하는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혼잡 문제와 안전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 뒤 방향을 잡기로 하고 공사를 중단했다.

지난 6월 16일과 26일 진행된 시민설명회에서 참석한 시민의 80%가량이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인명 사고 위험 우려가 가장 많았고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한 상황에서 향후 감나무골 아파트 입주 등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찬성 의견을 낸 시민들은 기구변화 개선 필요성과 자전거도로 폭을 3m로 두 배 확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제안 등이었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함께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우회전 일시 멈춤 정책 시행이 자전거도로 사고위험과 교통혼잡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을 중단했다.

이후 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차량 운전자도 불편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현재 3m 이상 넓게 조성된 인도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먼저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인도 내에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지 않고 사인블럭으로 표시한 설치해 자전거 운행 시 주의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

는 일정 규모의 인도는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를 아스콘이나 선으로 구분하는 분리형 겸용도로를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하천둔치의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를 분리해 안전사고 등의 예방도 추진한다. 하천은 시민 이용이 잦지만 신호 등이 없고 노면이 평탄해 충돌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용밀집 구간을 중심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정비에 나선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자전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는 더 안전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전거 정책을 적극 발굴해 생활 속에서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가상자산거래소 조회 후 해당 자산 압류·추심키로

전주시가 고질체납자의 숨겨진 가상자산까지 추적해 압류키로 했다.

시는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고질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상자산 압류·추심은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본인 확인 및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도 가상자산의 압류뿐 아니라 매각·추심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시는 7월, 8월 두 달 간 그동안 도를 경유해 진행했던 가상자산거래소 압류 진행 방식에서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압류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압류에서 추심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기간이 1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해진다.

시는 또 압류대상도 기존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이상(결손포함)에서 100만 원 이상(결손포함) 체납자로 확대, 현재 1차로 체납자 6185명(406억 원)의 가상자산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시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1차 압류에서 추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가상자산 압류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 납세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는 영세·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또는 징수유예 등 경제적 희생 지원을 제공한다.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발 빠르게 대처해 공평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건강관리 '강화'

### 전주시, TF구성·재난대응체제 가동... 우범기 시장, 경로당 방문 어르신 건강·안부 살피

우범기 전주시장이 장마와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을 맞아 폭염과 폭우, 식중독 등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13일 (사)대한노인회 전주지회와 완산동 백학정 경로당, 인후2동 용수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마와 폭염 등으로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경로당 이용자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시는 현재 2만5804명의 노인이 이용하는 전주지역 652개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간식비, 등·하절기 특별방안방비를 개소당 549~569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에어컨 고장과 장마철 누수 등 열악하고 안전 위험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총 5억6500만 원을 투입해 물품지원과 시설보수를 지원해주는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 중이다.

특히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폭염 대비 TF팀 운영을 통해 폭염 상



우범기 전주시장은 13일 (사)대한노인회 전주지회와 완산동 백학정 경로당, 인후2동 용수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전달 관리 및 무더위쉼터 정비 등 폭염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시민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무더위쉼터 690개소 운영 △폭염저감시설(그늘막) 306개소 운영(40개소 추가설치) △폭염 예방 홍보 부채 1만개 제작 △양산대여소(관광지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내)운영 △폭염예방 안내방송 △폭염 특보 발령 시 중대재해예방 관련 현장 근로자 열사병 예방 대책 마련 및 노인일자리사업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보조간선도로까지 도로를 서비

스 살수 작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수행인력의 폭염특보시 행동요령 안내 △취약계층 안부 확인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 예방 안내방송 등 폭염대비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한편, 우범기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여름철 폭염과 폭우, 태풍, 식중독 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상산고 학생 대상 스토킹 범죄 예방교육 실시

전주시는 13일 상산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범죄 예방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10대~20대에서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디지털성범죄 유형과 대처방법이나 피해예방을 위한 인식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스토킹범죄 대처 방법 △피해자 지원제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사례 등을 소개해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달 21일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 설명과 스토킹 범죄 사례도 다뤘다.

특히, 시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학생들의 사소한 행동이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시키기도 했다.

김선욱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특히 학교 내 스토킹 범죄는 암수 범죄로 남을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찾아가는 주거복지 교육과 이동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운영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교육과 이동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복지교육 및 상담'은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지원사업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공과 민간에서 실시하는 각종 주거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주거복지에 관심 있고 정책에 대해 소개받고 싶은 기관 등에서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전문 지식을 가진 주거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단순한 정책 설명에 그치지 않고 교육 후에는 주거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개인별 상담도 진행된다.

센터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주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주거 관련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센터는 7월에는 지난 5일 덕진지역자활센터 자활 주민을 시작으로 전북이주여성상담소와 원광포자원, 전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관 등을 찾아가 맞춤형 주거복지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